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충남도의 대응방안

2015년 3월 9일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Contents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 3

02. 대응 정책 현황 / 10

03. 외국의 대응 사례 / 14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 24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1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

01_2 저출산의 원인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01_4 충남 고령화의 현황

01_5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1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

- 아기 울음소리 사라지는 한국, 신생아수 30년새 반토막
(2013년기준 신생아수 43만명)
- 한국, 13년째 출산율 1.3명 못넘긴 세계 유일한나라(OECD가입국 기준)
-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출산율이 1.0명이 되면 한 세대가 바뀔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준다. 저출산현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대가는 자칫 공멸로 나타날 수 있다. (2100년 인구절반, 2700년 지구에서 한국인이 사라짐)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할 빈곤노인이 늘어날 가능성과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통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2 저출산의 원인 : 결혼연기, 출산감소·기피

1) 소득·고용 불안정

- ▶ 청년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 ▶ 가정 형성 · 출산 소극적

2) 자녀양육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

-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 지원망 약화

3)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 ▶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 ▶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4) 결혼 · 자녀관 약화

- ▶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 ▶ 전통적 자녀관 약화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 충남도의 저출산 경향은 전국적 추이와 유사하게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2001년 이래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이하)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는 2008년 이후 1.4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시도별 합계출산율(전국평균1.19)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제주(1.43명)순으로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에도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표 1> 주요 시도별 합계출산율

전국	전남	충남	세종	제주	서울	경기
1.19	1.52	1.44	1.44	1.43	0.97	1.35

-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52에서 2005년 1.2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과 2007년도 1.35, 1.5로 상승한 이후 2008년 이후에는 1.4수준을 유지함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3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1.19, 2013)보다 높긴하나 인구대체 수준인 2.1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혼 및 비혼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1.30이하로 크게 반락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기준, 충남도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6.0%로서 전국 평균 (12.2%)보다 상회하며, 전남(21.4%), 전북·경북(17.5%), 강원(16.4%)이어서 전국 5위임

<표 2> 주요 시도별 고령화율

전국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서울	경기
12.2	21.4	17.5	17.5	16.4	16	10.9	9.7

- 16.0%인 고령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인 20%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특히 청양과 서천은 2003년 말 각각 22.0%,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14년말기준 청양 30.9%, 서천 29.8% 으로 주민4~5명 중 1명이 65세이상 노인임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4 충남 고령화의 현황

- 부여군 28.0%, 금산군 25.4%, 태안군 25.2%, 예산 24.8% 등 군단위 지역은 모두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음(2014년말 기준)
- 충남도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징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젊은 시군이 전무 하며 고령화사회(7%~14%미만)에 도달한 시군이(3:천안, 아산, 계룡)개가 있고 고령사회(14% ~20%미만)에 진입한 시군이(2: 서산, 당진)개가 있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시군도 청양을 위시, 10개나 해당됨
- 이는 충남도 상당히 고령화가 진척된 상태로, 조만간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시군의 주를 이루는 광역도가 될것임

01. 충남도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01_5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문제

1) 생산가능인구(15~64세)감소에 따른 충남도 경쟁력 약화

-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에 따른 도내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도내 저축·소비는 물론 도내로의 투자위축 등, 도 경쟁력 저하 및 재정자립도 약화를 초래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도민의 부담 증가

- ▶ 고령화진전에 따라 충남도는 노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3명, 2030년에는 2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3) 초고령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부담 가중

- ▶ 초고령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부담 가중. 초고령인구는 소득의 사회 및 가족 의존도가 높고 심각한 질병이나 장기만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이들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담도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함

❖ 75세 이상 진료비 : 2004년 1조 7100억 → 2013년 8조 6500억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현황

02_2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 현황

02_3 충남도의 고령화 대응현황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현황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마다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 선택과 집중(만혼과 맞벌이)
 - ▶ 구조적 문제 대응(고용·교육·주거)
 - ▶ 실천·정착에 중점(사회적 여건조성)
 - ▶ 전방위적 고령화 대책 (생산인구 감소대비)
 - 무상보육, 출산비지원 등 예산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노인, 여성 고용 확대와 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세대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2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현황

1) 저출산 관련 시책

- 충남도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음. 경제적 지원의 세부항목으로는 보육비·교육비·양육비로 범주화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개선은 보육서비스, 교육정책, 보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구분할 수 있음
- 저출산 관련하여 민선5기의 정책 성과
 - ▶ 2011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보육료를 지원하던것을 (만5세이하) 전계층 보육료 지원으로 확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원장(150천원), 교직원(100천원) 상향지원
 - ▶ 영유아 급·간식비(도:시군→7:3, 도+시군 51억)지원
 - ▶ 15개 시군 투명한 어린이집 시설운영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충남은 경제적 지원에서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시행정책이 국무총리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실적을 내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하위권 수준),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설치비율 등, 사회적 환경 개선사업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02.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현황

02_3 충남도의 고령화 대응현황

1) 고령화 관련 시책

- 민선 5기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 ▶ 행복경로당 조성을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 ▶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 이동 목욕, 빨래차보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증가 등을 위한 통한 독거노인·불편노인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 ▶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 ▶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 최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도 차원에서 1·2차에 걸쳐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고령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노인복지만의 문제가 아닌 소득·복지, 의료·보건, 산업·노동·주거·여가·교육·문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지만 아직 종합적인 수립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03_2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1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자녀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국가가 적극적 기여
- 프랑스의 경우 1991-1995년 1.71명이던 출산율이 2000년에는 1.89명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92명으로 다시 증가, 2006년 출산율 2.0명으로 EU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 기록중임
 - (1) 이들 국가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
 - (2) 공공보육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 실시
 - (3) 셋째아 정책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4) 세금감면, 연금 크레딧 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 확대
 - (5)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2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 1980년대 심각한 저출산율을 경험한 프랑스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음
-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였음
- 프랑스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은 정당을 불문하고 역대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고 이를 위해 자녀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이 GDP의 3%를 차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음
- 다자녀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 OECD국가 중 비교적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거꾸로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프랑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8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한때 합계출산율이 1.5정도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회복되어 1.9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큼
-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 '저출산의 덫'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1) 육아휴직, 부모보험

- 스웨덴에서는 자녀출산 10일 전부터 8세 생일때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 (노동일수기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중 390일은 휴직 전 급여의 80%가, 그리고 나머지 90일간은 정액의 휴직급여가 지급됨
- 390일중 부모 각각에게 60일의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동일기간 내에는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 수 있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 다만, 출산후 29일은 여성에게 무조건 수급권한이 주어져 이 기간중에는 부모 모두가 휴직할 수 있음
-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0일이 추가됨
- 육아휴직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전일, $\frac{3}{4}$, $\frac{1}{2}$, $\frac{1}{4}$ 등의 형태로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함
- 여성근로자는 자녀가 1년6개월이 될 때까지 전일제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지위로 복귀함
- 부모보험제도는 육아휴직시 부모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재원은 사업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지급 급여의 2.2%)로 마련됨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2) 보육지원

- 스웨덴에서는 공보육은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필수요소로 자리하고 있음
- 공공육아시설은 취업모, 독신모, 저소득층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나, 0-7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공육아서비스 이용률은 1975년에서 17%에서 1990년에는 64%로 대폭 증가함
- 스웨덴 보육시설의 주무기관은 1996년 사회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취학 전 교육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3 스웨덴 출산장려정책

3) 수당제도

- 아동수당은 1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첫째아부터 1인당 월 950크로나 (SEK)를 지급(1 크로나 : 132원)
-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되어 셋째아는 245, 넷째아는 769, 다섯째아 이상은 월 950 크로나가 더 지급됨
- 이상 부모보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3.31%를 차지하고 있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출산율 회복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정책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가능함
-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이나 한국같은 유교문화권 국가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자아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발전상과 전통적인 역할규범간에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반대로 오랜기간 동안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 온 북유럽이나 불어권 국가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03. 외국의 대응사례

03_4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둘째,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및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됨
- 즉, OECD 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아야 출산율 역시 높은것으로 밝혀짐 (한국 61.2, 스웨덴82.5%, 프랑스 76%, 2012년 기준, 여성고용률)
- 저출산 극복 실패 사례
 - ▶ 독일 : 카톨릭문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적분업유지, 여성 취업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저출산 경향 지속
 - ▶ 일본 :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 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정부지원 부족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지속
 - ▶ 요컨대 이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분업적인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남성은 가계,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1 충남도의 향후 대응 방향 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1 충남도의 향후 대응 방향 제언

- 결혼 자체가 기피되거나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혼가족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환경조성,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은 기혼가정의 출산 장애요인 완화에만 초점을 둔 정책임
 - ▶ 초저출산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문화, 가부장적 유교문화로 인한 성적분업, 비혼화 및 만혼화 등이 주요 원인임
- 이와 동시에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에 얼마나 중차대 한지에 대한 도민적 인식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또 경험있고 건강한 노인인력을 위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령화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결혼장려로
 -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핵심은 '만혼'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듯이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출산 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옮겨옴
 - ▶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보육관련 정책으로 출산을 지원해봐야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 2014년부터 추진중인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도는 대전에 비하여 늦음)

- 낮은 문화적 수용성의 극복(국민인식전환)
 - ▶ 아시아 선진국들의 기성세대는 동거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외출산은 극히 예외적임
 - ▶ 결혼·출산·양육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혼외출산에 대한 편견 버려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 보장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일과 가정의 양립
 - ▶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어 정부대책 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
 - ▶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의 방향이 양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와 일-가정 양립 가능 기업문화 조성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함
 - ▶ 따라서 보육서비스 공급정책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인식확산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결혼 및 출산과 자녀양육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인 교육기간의 장기화, 높은 사교육비, 과도한 대학진학을 등의 사회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충남은 영·유아 10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1곳(0.94)도 안되고 부여군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음
(프랑스는 3세이상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임)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하면 출산율 역시 떨어지므로 20~30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함
- 만혼풍조와 이에 따른 산모의 고령화로 아이 두명을 갖기 힘든 구조이므로 에서 초혼연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평균 출산연령 32세를 넘어섰고 2014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아이 안 낳는'기조가 계속됨)
- 어린이집은 경제활동을 하느라 애 키우기 힘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전업주부 보육료 지원을 줄이고 직장맘 위주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함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 ▶ 도의 초고령화추세에 따라 고령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정책개발이 시급함,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체감형복지서비스, 노인, 도시은퇴자 등을 위해 의료·주거·여가·복지 등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 구성을 추진해야 함

- 노인빈곤문제와 일자리 대책

- ▶ 저출산의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인구구조가 변화여 65세 이상 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단독세대의 비율이 높아져 충남도가 직면하는 당면과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가 될 고령자계층의 요구임
- ▶ 따라서 노인들도 돈을 벌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노령인구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임
- ▶ 지자체에서 정책적 해법은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04. 민선 6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제언

04_2 충남도의 정책방향

-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 ▶ 급속한 고령화진전과 지역별 고령화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안정생활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안목과 미래설계는 미흡한 실정임
- ▶ 따라서 고령화 정도, 복지수준 및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세대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정책

- ▶ 프랑스의 EMSEMBLE 2 GENERATION(2세대간 함께 하기) 결사체(association)처럼 세대간 소통을 위한 기제를 민·관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006년 만들어진 이 기독교단체는(노인과 젊은이가 한 집에서 기거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씻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으로써 2012년 '세대간 연대 유럽 연간 대상'을 수상하였음



감사합니다